

21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 (8)

자료제공 환경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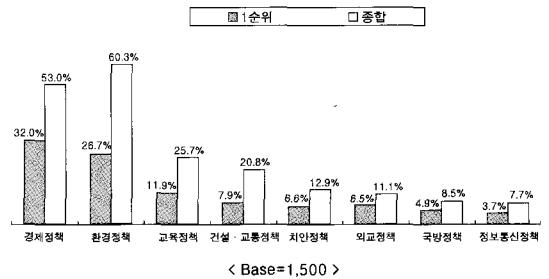
PART IV. 환경정책 일반에 대한 평가

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.

1. 국가정책 중 환경분야의 우선순위 (* 중복응답)

결과분석

□ 국가 정책에 대한 중요도(1순위 기준)를 살펴보면, '경제정책'(32.0%)과 '환경정책'(26.7%)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. 그 다음으로 교육정책(11.9%), 건설·교통정책(7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


□ 중복응답결과를 종합하면, 환경정책(60.3%)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정책(53.0%), 교육정책(25.7%), 건설·교통정책(20.8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
■ '경제정책'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전/충청(37.1%)에서, '환경정책'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대구/경북(30.5%), 광주/전라 거주자(31.7%), 주부(30.8%),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(1순위 기준)

■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으로 조사되었으나, 중복응답결과를 종합하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,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넓게

2. 환경문제 해결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

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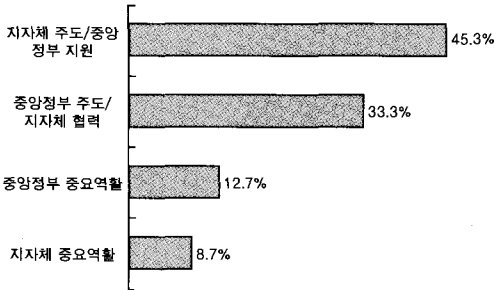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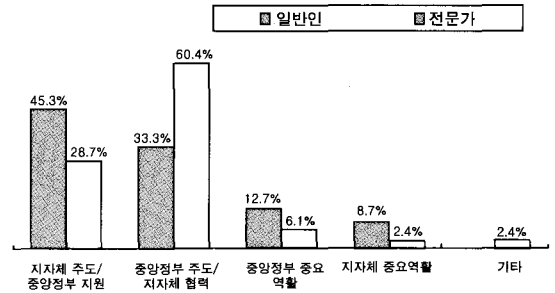
□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질문한 결과, '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'는 의견이 45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반면 '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'는 의견은 33.3%로 조사됨. 그 밖에 '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'는 의견은 12.7%, '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맡

아야 한다'는 의견은 8.7%로 나타남.

-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대구/경북(54.0%), 강원 거주자(60.4%),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서울 거주자(41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-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과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됨.



< Base=1,500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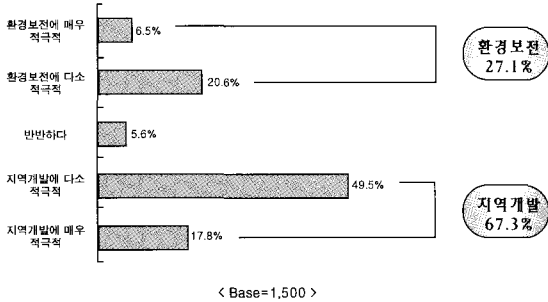
결과분석

- 환경전문가 그룹의 경우,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배분에 대해 '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해야 한다'(60.4%)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, 일반국민 조사결과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 반면, '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'는 의견은 28.7%로 조사됨.
-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, 일반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데 반해, 환경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3.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

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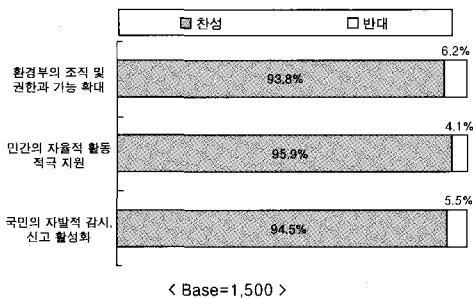
-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관심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, 일반국민의 67.3%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'지역개발에 관심이 많다'(지역개발에 적극 관심 17.8%, 지역개발에 다소 관심 49.5%)는 의견을 제시함.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'환경보전에 관심이 많다'는 의견은 27.1%(환경보전에 매우 관심 6.5%, 환경보전에 다소 관심 20.6%)로 나타났으며, '반반'이라는 의견은 5.6%임.
-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'지역개발'에 힘쓰다는 의견은 부산/경남(77.2%), 대전/충청(75.5%), 강원(71.7%) 지역, '환경보전'에 힘쓰다는 의견은 광주/전라(40.4%)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에 보다 관심이 많다는 지역주민의 평가를 고려할 때,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망되고 있음.



4.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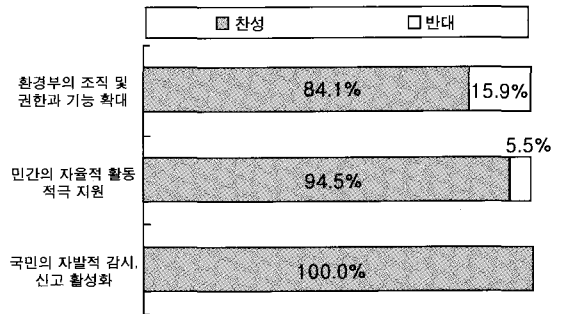
결과분석

- "환경부 조직, 권한 그리고 기능의 확대"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, 일반국민의 대다수(93.8%)가 '찬성한다'는 긍정적 의견(적극 찬성 34.7%, 다소 찬성 59.1%)을 나타냄.
- "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"는 의견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면, 일반국민 대다수(95.9%)가 '찬성한다'는 긍정적 의견(적극 찬성 47.3%, 다소 찬성 48.6%)을 나타냄.
- "국민의 자발적 감시와 신고를 활성화한다"는 의견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면, 일반국민의 대다수(94.5%)가 '찬성한다'는 긍정적 의견(적극 찬성 47.9%, 다소 찬성 46.6%)을 나타냄.



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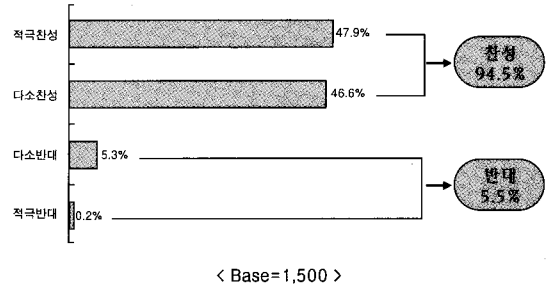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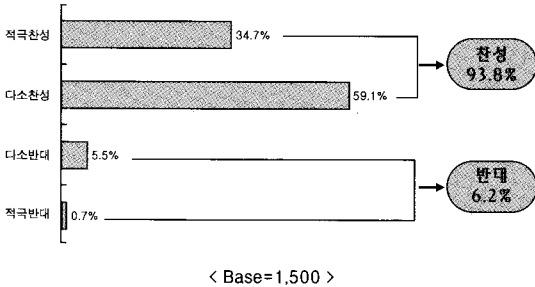
- "환경부 조직, 권한 그리고 기능의 확대"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의 84.1%가 '찬성한다'는 긍정적 의견(적극 찬성 56.1%, 다소 찬성 28.0%)을 나타냄.
- "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"는 의견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대다수(94.5%)가 '찬성한다'는 긍정적 의견(적극 찬성 62.2%, 다소 찬성 32.3%)을 나타냄.
- "국민의 자발적 감시와 신고를 활성화한다"는 의견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모두(100%)가 '찬성한다'는 긍정적 의견(적극 찬성 66.5%, 다소 찬성 33.5%)을 나타냄.



4 1. "환경부의 조직과 권한, 기능을 확대한다"는 의견

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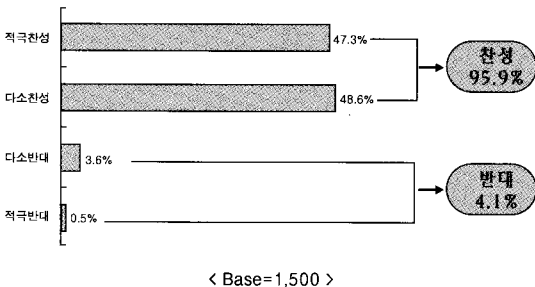
- 환경부의 조직과 권한, 기능 확대에 찬성하는 긍정적 의견은 93.8%(적극 찬성 34.7%, 다소 찬성 59.1%)인 반면, '반대한다'는 의견은 6.2%(적극 반대 0.7%, 다소 반대 5.5%)로 조사됨.



4 2. "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"는 의견

결과분석

-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은 95.9%(적극 찬성 47.3%, 다소 찬성 48.6%)인 반면, '반대한다'는 의견은 4.1%(적극 반대 0.5%, 다소 반대 3.6%)로 조사됨.



4 3. "국민의 자발적 감시·신고를 활성화한다"는 의견

결과분석

- '국민의 자발적 감시·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'는 의견에 찬성하는 긍정적 의견은 94.5%(적극 찬성 47.9%, 다소 찬성 46.6%)인 반면, '반대한다'는 의견은 5.5%(적극 반대 0.2%, 다소 반대 5.3%)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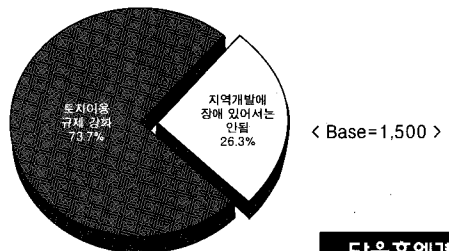
5.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의견 평가

결과분석

- 환경보전을 위해 '토지이용을 규제해야 하는가?'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살펴보면, '환경보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'는 적극적 의견이 73.7%인 반면, '환경보전 때문에 지역개발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'는 지역개발 중시형 의견이 26.3%로 조사됨.

- '환경보전'을 강조하는 의견은 30대(77.2%),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'지역개발'을 강조하는 의견은 강원(39.6%) 거주자, 군지(33.7%) 거주자,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-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'환경 중시형 시각'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의견과 일치되고 있음.



다음호에 계속